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무엇이 문제인가?

- 낡은 이념대립과 대통령의 효심 -

■ 들어가며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정치권의 대립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10월 12일 정부는 이른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는 발표를 했다. 국정교과서는 2017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 2013년 2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는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늘 그래왔듯이 정권이 바뀌면 정책 또한 바뀌기 때문이다. 각계각층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국정교과서를 다음 정부에서 무리하게 끌고 갈 명분이 없다.
-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역시 명분이 없다.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는다고 주장하지만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 대통령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모양새다.
- 이 상황에서 언론은 어떠한가.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는 태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이념대립과 여야공방만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사)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양문석)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약 2주간의 방송뉴스를 분석하였다. 언론의 보도태도는 어떠한지, 해당 이슈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 분석대상

- 지상파 3사, 종편 4사의 저녁종합메인뉴스 중 국정교과서 관련 보도
- 2015년 10월 12일 ~ 10월 23일 (12일)

	KBS 뉴스9	MBC 뉴스 데스크	SBS 8뉴스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JTBC 뉴스룸	MBN 뉴스8	합계
개수	21	15	14	45	23	53	17	188
(%)	(11.2)	(8.0)	(7.4)	(23.9)	(12.2)	(28.2)	(9.0)	(100.0)
	50 (26.6)			138 (73.4)				

- 보도빈도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상파와 종편의 보도 수이다. 전체 188개 중에 지상파는 50건(26.6%)에 그치고 있다. 지상파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고, 종편은 “말을 많이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종편의 뉴스 태도는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JTBC의 경우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전달하고 있으며 심층적인 보도를 다루고 있었다. 해당 기간에 방송사들이 보도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정부입장 받아쓰기 1: 이념대립

- 10월 12일 교육부 장관인 황우여가 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상파 3사는 황우여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해당 소식을 첫 번째로 전했다.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KBS, 10. 12)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MBC, 10. 12)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SBS, 10. 12)

- 여기서 사용된 주요 단어는 ‘이념적 편향’이다.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KBS는 친절하게 새로 만들어질 교과서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 이념적 편향은 국정교과서 정국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단어다. 이 단어가 사용된 이후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한지 또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기도 전에 국정교과서 논쟁은 이념갈등이 되었다. 찬성하는 사람은 ‘보수—우리 편’이 되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진보—상대 편(또는 나쁜 편)’이 되었다.
- TV조선과 채널A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강의 영상을 소개하며, 좌편향된 역사 수업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빨리 죽었어야 한다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감상문까지 써내라고 한 것인데, 학부모와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10. 14)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과거 만주에 있을 때 살해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며 그때 죽었으면 역사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10. 14)

- TV조선과 채널A의 표현 그대로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의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사가 어떠한 취지에서 수업을 진행했는지 전후 맥락을 알려줘야 한다. 물론 해당 교사의 육성이 전달되기는 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뒤따랐다고 보기 어렵다.
- 해당 보도는 역사 수업과 관련해서 편향성을 지적하는 맥락으로 작용하며,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구성을 갖게 한다.
- 국정화 발표 이후 보도된 TV조선과 채널A의 뉴스 제목이다. 정부가 이념적 편향을 말하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제목의 사용은 찬성과 반대가 옳고 그름이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북한 학살 없고…노동운동 부각” (TV조선, 10. 12)

“근현대 비중 높고 끼리끼리 필진 포진” (채널A, 10. 12)

■ 정부입장 받아쓰기 2: 전지전능한 목소리

- 국정교과서 논쟁은 이념대립으로 구성됐고 야당의 반대가 뜨겁다. 국론도 분열될

조짐이다. 국정화 반대, 집필진 구성 난항, 짧은 시간, 이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한다. 한 방향을 가리키며 나타나는 이 목소리는 대립의 해소를 조속히 촉구한다.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서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KBS, 10. 13. 대통령 육성)

“정치권은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 올바른 역사 교육 정상화로 국민 통합을 이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10. 13)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TV조선, 10. 13)

“정부 검정을 거친 교과서에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정화 추진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론 분열을 일으켜선 안 된다며 야당도 겨냥했습니다.” (JTBC, 10. 13)

“박 대통령은 방미 직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10. 13)

- 국가의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대통령은 어김없이 등장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하라는 당부의 말을 전한다. 사실 원인이나 책임귀속이 정부에 있을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등장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며, 대통령은 선(善)이 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야당은 당연히 악(惡)으로 구성된다.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발생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구성하고 해석했던 전형적인 언론 프레임이다.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목소리는 등장했다.

■ 교과서 국정화를 바라보는 시각

-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가장 큰 차이는 의무 사용 여부에 있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배워야하며 검정교과서의 경우 학교장이 승인하여 사용한다.
- 국정교과서는 정권이 바뀌면 역사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검정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해석에 의한 역사서술을 인정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분명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검정 체제가 다양성과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편향성과 왜곡을 방임하는 빌미가 되어 왔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다시 국정화 논의가 나온 겁니다.” (MBC, 10. 12)

“이념 논란이 된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집필진이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지금처럼 매번 수정을 지시하는 검정제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MBC, 10. 12)

- 자유로운 의견표시와 교환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정부가 교과서의 내용을 지적하더라도 이견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 수정 지시를 불복하기 때문에 국정화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 10월 12일자 MBC 뉴스는 정부의 의견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악마의 발톱 감추고 서술 국정화 당론” (채널A, 10. 15)

-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재 역사 교과서가 “악마의 발톱을 감춘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쓴다. 채널A는 이를 그대로 받아써서 뉴스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가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검정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는 여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없는 보도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가 좌편향 됐기 때문에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는 이념대립을 재생하는 보도일 뿐이다.

■ 집필 거부와 공방 확산: 부정적인 것의 구성

- 국정화가 필요했다면, 해석과 사실에 기반을 둔 역사를 구성하는 교과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었어야 했다. 그러한 논의가 없었다면 언론은 상황을 비판하며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어야 했다.
- 그러나 언론은 낡은 이분법에 기대어 이념대립을 확대 재생산 하고 있었다. 정부

의 국정교과서 발표 이후 각계각층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역사학계에서는 집필 거부 성명도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학계에선 집필 참여 거부 선언이 잇따르고 있어 집필진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10. 14)

“황우여 교육부장은 집필 거부 움직임이 있지만 교과서 제작에는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10. 14)

-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해야 하는데, 학계의 거부 때문에 필진 구성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제작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논란이 심한 부분은 국정교과서에 실지 않을 방침입니다.” (SBS, 10. 14)

- 뿐만 아니라 SBS의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교과서에 실지 않을 방침이라는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집필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국정화 논란에 두 동강 난 대한민국” (SBS, 10. 19)

“교과서 사생결단 여론전” (JTBC, 10. 21)

- 이념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론 분열은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은 부정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집필 거부에 대한 시청자들의 판단이나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게 뉴스가 구성되었다.

“역사 교과서 공방이 여야 정치권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도 국정화 찬반을 놓고 전면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격돌했습니다.” (KBS, 10. 22)

“교육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10. 23)

“국정화 찬반 집회...서울 도심 몸살” (TV조선, 10. 23)

“진보 단체의 촛불 집회,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이념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10. 23)

- 이념대립, 여야공방이 장외로 확장되었음을 알린다. 이는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시민사회로 확산된 것에 불과하다. 언론은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킨다. ‘전방위 확산’, ‘여론전’, ‘서울 도심 몸살’ 등의 단어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또는 집단)에게는 여지없이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 분석의 함의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 정식 출범했다. 그리고 이미 임기의 절반을 지난 상황이다. 2018년 새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교과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25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가 새정부가 들어서면 폐기될 2년짜리 교과서라고 평가한 내용이 나온다.
- 그리고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수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현대사 부분은 수능에 잘 출시되지 않는다. 논란이 많아서 문제의 소지가 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표현처럼 대통령의 효심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 국정교과서에 대한 보도 역시 일련의 정치보도와 마찬가지로 이념논쟁과 그에 따른 여야의 대립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면 왜 문제인지를 따져보는 보도는 찾기 어려웠고, ‘역사전쟁’, ‘두 동강’, ‘사생결단’ 등과 같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여야공방을 주로 나타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과서 국정화라는 실재는 사라지고 이념 논쟁만 남는다.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이 이슈는 지속될 수도 있고, 다른 이슈에 묻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 현재 각계각층에서 국정교과서 반대의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뉴스들은 이러한 견해를 여전히 이념대립이나 정치권 공방의 수준 정도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방송뉴스들이 정부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심층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다.

- 더불어 지상파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보도 태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무료로 전유(專有)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노력과 책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